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h1 style="text-align: center;">가 정 통 신 문</h1>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2 - 41호</p> <p>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목 :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계기교육 자료안내</p>		

1. **5·18 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

2. **발단** :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였다. 이전 정권에서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3. **배경** : 1)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붕괴된다. 이를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가시화되는데, 민중운동 및 반(反)군부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군부의 집권으로 더욱 후퇴될 것을 우려하여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2) 시위가 확산되어 가자 신군부는 5월 14일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현실화하였고, 17일 오후 7시에 공수부대 투입명령을 내렸다. 신군부는 5월 17일 밤 11시 40분에 '비상계엄이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3) 5월 16일에 개최된 집회를 해산하면서 약속대로 학생들은 18일 오전에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첫 충돌이 발생하였다. 제7공수여단에 이어 추가로 파병된 제11공수여단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둘렀고, 무차별 연행하였는데,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도심은 전쟁터로 변해갔다. 제3공수여단이 추가 투입되는 등 계엄군은 계속 늘어났고 발포까지 이루어져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4) 마침내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후퇴시킴으로써 27일까지 '민중자치'가 실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군은 광주의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다수가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는 5·18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학생민주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가면서 죽음으로 확보한 성과를 지속시키고자 했다.

5)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총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001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명에 이른다. 비록 5·18민주화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한 '5월운동'을 통해 계속되었다.

4. **발전** :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0년 8월 6일)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5년 12월 19일)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청산작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한 선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결과**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바뀌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광주사태'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사건의 명칭에서 '광주' 이름을 배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민 혹은 민주화운동 단체, 학계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또는 '5·18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일원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장소로 국립 5·18묘지, 5·18민주공원, 5·18자유공원을 비롯하여 100여개에 이르는 표지석, 안내표시판, 소공원이 조성되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2022. 05. 18.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